

도, “지역 현안 대선 공약 반영토록 노력”

이재명 민주 대선 후보 공약에 전북 관련 현안 포함
일부 공약 재탕 지적에 “해결 못한 숙원 과제 반영
새로운 추진동력 확보한 점에서 의미 있어” 평가
군산조선소 재도약·공공의대 설립 등 대응방향 설명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선 국면에서 전북 현안을 어떻게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노력하는 등 도정 발전을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도청 주요 현안과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천 실장은 먼저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북 33선터를 방문해 에너지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과 산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재생에너지 산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지사는 전주·완주 하계올림픽을 친환경 올림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이에 큰 관심을 보였었다는 점을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4월 24일 호남권 공약을 발표하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폭 지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천 실장은 “일부 공약은 재탕 지적도 있지만, 이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숙원 과제들이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도 주력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당 차원의 공약집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군산조선소 재도약,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도당과 중앙당에 전달해 보완할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디지털 기반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따라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안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 실장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공공의대법이 이번 대선 공약을 통해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도 국가예산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중앙부처 예산 심의 단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110개 중점 사업을 선정해 중앙부처 활동을 전개 중이며, 김 지사와 경제

부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진이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 실장은 “5월 30일까지 부처 예산안에 전북도 중점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사 주재로 실·국 접점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지역구 국회의원 9명과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조찬 간담회에서는 2026년 국가 예산 대응, 메가 비전

프로젝트 대선 공약 반영, 전주 하계올림픽 추진, 제2 중앙경찰학교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주 하계올림픽과 관련해 정부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천 실장은 “도내 주요 현안이 대선 과정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광역교통망 중심도시
전주 실현에 역량 집중”

전주시의회 “대광법 개정안
균형발전 위한 중요 발걸음”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따른 전주시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의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남관우 의장은 전주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분기점”이라며 “이는 전주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인 만큼 전주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관우 의장은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 지자체 의회와 연대해 광역교통체계를 힘있게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감사로서도 전국 연대를 이끌어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와 제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교통 인프라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향후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수립 시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전주시가 대광법 적용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인접 도시와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권희성 기자

케이블TV “생존 위기”… 제도 개선 논의

민주 정동영 의원, 케이블TV 업계와 정책간담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28일 국회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케이블TV 업계의 어려움을 논의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급성장 등 통신사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으로 케이블TV 업계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는 호소에 정 의원은 “지역성과 다양성을 지키는 방송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콘텐츠 사용자 거래 체계 마련 △광고 및 심의 규제 완화 △지역 채널 법적 보호 및 지원 등을 건



의했다.

특히, 연간 5,000건 이상의 재난방송 송출과 160편 이상의 지역 보도 제작 등 지역 공공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미디어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 채널 보호와 커머스 방송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SO와 지역 채널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역 사회의 삶과 이야기를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방송 공공성과 산업 경쟁

력의 균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콘텐츠 대가 문제,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 구조, 방송 및 광고 규제 등 복합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와 산업적 균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동영 의원은 “방송산업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공공재”라며, “지역성과 다양성을 지켜내는 미디어 환경을 위해 국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8일 자신의 퇴임식에서 초청 직원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새로운 길에서도 항상 전북을 응원할 것”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퇴임식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4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4대 최병관 행정부지사의 퇴임식을 거행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전북자치도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아온 균형 잡힌 행정 전문가다. 특히 고향 전북에서 공직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마지막 발걸음도 고향에서 떼며 공직 여정을 의미 있게 마쳤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공로패와 캐리커처 액자를 전달하며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큰 축이 되었다”며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은 물론, 도청 전반에 따뜻한 리더십을 남겼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송상재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 직원들의 뜻을 모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늘 열린 귀와 따뜻한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했다. 그 진심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퇴임식 이후에는 1층 현관에서 초청 전 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환송과 감사의 시간이 이어졌다. 직원들은 “늘 따뜻하게 공감해 준 부드러운 리더십을 잊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최병관 부지사는 “전북에서의 마지막 공직 생활은 제게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잠시 떠나지만, 새로운 길에서도 전북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후배 공직자들에게 “여유를 가지되, 소임을 다하는 자세”를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김경구 군산시의원 “군산항을
정치 희생양 삼지 말라” 비판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28일 군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항을 정치의 제물로 삼는 저열한 행위를 군산시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개발은 지역 상생을 위한 범시민적 염원이었음에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김제시 입장을 대변하며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의원의 발언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군산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신영대 국회의원 역시 군산항 보호를 위한 실질적 행동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입법과 예산 반영 등 기본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민 사회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무능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율러 “해수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이 참여하는 ‘군산-새만금 통합 항만 발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치적 계산으로 군산시민의 생존권을 정쟁에 이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무책임한 정치인들에 대해 차기 선거에서 시민들이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쌀값 폭락·기후 위기 속 농가 보호 총력

민주 이원택 의원,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28일, 농업 민생 4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쌀값 폭락과 기후 위기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에 재발의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22대 국회 초반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바 있다. 이 의원은 “국가 유지 발전의 근간



인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민생농업 4법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의 소득 손실을 일정 비율로 보전하고, 농업 재해 발생 시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 민생 필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재발의된 법안은 기존 21

대 국회 버전보다 보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에는 재배면적 관리 시 소득 감소분 보전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대형 산불을 농업 재해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쌀값 폭락이 거듭되고,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재해 심화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을 바로잡고, 농업·농어촌·농어민의 생존권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생농업 4법 재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전북자치도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환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출을 환영하며, 전북도민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수 정책실장은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북의 구조적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전북의 3중 소외론을 제기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박 실장은 “국우의 거지 선동

과 퇴행적 질서에 맞서, 전북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정권 교체와 전북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도당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힘을 합칠 것을 선언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강동화 도의원, 기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록물 생산량 증가로 문서로 공간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학교의 기록물 관리 소홀 등으로 기록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발의했다.

강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기록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록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 개정 조례안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만호 기자